

국가전략연구위원회 이슈브리핑 28호 (발간일: 2024.7.22.)

한·미·일 안보협력의 전개와 과제¹⁾

이정환 (서울대학교)

1. 냉전형 한미일 안보관계의 성격

전후 한국과 일본 양국은 군사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으나, 미국을 통해 연결되었다. 전후 초기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핵심 파트너로 장제스의 중화민국을 선택하고 일본의 철저한 개혁과 민주화를 기획했던 미국은, 냉전의 도래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핵심 파트너를 일본으로 변경하고 일본에 대한 점령정책을 정치적 안정으로 변동시켰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동아시아의 진영질서 구도는 1950년에 보다 선명해졌다. 1월 코민포름에 의한 일본공산당 평화혁명론 비판, 2월 중소우호동맹상호조약 체결, 6월 한국전쟁 발발의 일관된 흐름 속에 동아시아 냉전 진영 갈등은 첨예화되었다. 한국전쟁을 통해 한반도가 동아시아 진영 갈등의 중심 무대가 되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냉전형 한미일 안보협력 관계가 형성되었다.

미국의 한국전쟁 관여에서 주일미군기지는 후방으로서 기능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에 주둔하던 미군은 한반도 관여에 있어서 연합군(평화조약 발효 전까지), 미군, 유엔군의 세 성격을 지녔다. 연합군으로 일본에 주둔하던 미군을 계속해서 동아시아 지역질서 관여에 활용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와 미군의 주둔을 용인하여 평화조약을 체결하려는 일본 요시다 정권의 의도가 만나서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이 체결되었다. 평화조약 발효 이후에도 일본에 주둔하게 된 미군은 미일안보조약의 극동 조항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에 관여할 수 있는 루트를 공식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¹⁾ 이 글은 2024년 7월 17일 제10차 사이버 국가전략 포럼에서 발표된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전장국가 한국, 기지국가 일본의 역할 분담 속에서 한일 양국이 미국과 개별적 안보조약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한미일 안보관계는 형성되었다.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에서도 극동 조항은 유지되며, 당시 체결된 비밀문서 조선의사록을 통해서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의 한반도 발진에 대해 '사전협의' 권한을 방기하겠다는 약속했다.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의 자유로운 군사 활동 전개가 냉전 초기 한미일 안보협력의 핵심 성격이었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관여 축소 움직임 속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보다 발전한다. 1969년 닉슨-사토 공동성명에서 사토 총리가 '한국의 안보가 일본의 안보에 긴요하다'는 표현을 통해 한국의 안보에 대한 일본의 직접적 관계성을 언급하였고, 1960년대 말에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가 진전되었다. 하지만, 한일 안보협력의 핵심 대상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국한되어 있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협력에 있어서 미국 중심성, 일본의 기지 제공 역할, 미국과 함께 싸우는 한국의 역할은 지속되었다.

2.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와 일본의 군사적 역할 변화

냉전기 동안 한반도 위기에 대한 일본의 역할은 미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것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한반도 위기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탈냉전기 들어 일본 자위대 역할의 변화가 시작된다. 1990년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가 속에서 1997년 미일방위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다. 1997년 미일방위가이드라인 속에서 일본의 자위대는 일본 주변지역에서 미군에 대한 (비전투지역으로 제한된) 후방지원을 할 수 있는 역할(주변사태)을 새로 부여받게 되었다. 주변사태에서 일본 자위대의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은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의 군사활동에 대한 자위대의 진전된 관여를 의미한다.

일본 밖의 유사 상황에 대한 자위대의 관여는 2010년대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 속에서 보다 다각화되었다. 미군의 군사활동에 대한 자위대의 (비전투지역에서의) 후방지원은 '중요 영향사태'로 표현이 바뀌어 유지되었다. 한편, 일본이 오랫동안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해 왔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을 2014년 변경한 후, 일본 정부는 '존립위기사태'를 설정하였다. 존립위기사태 (중요 관계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일본에 존립위기가 될 경우)에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여 중요 관계국과 함께 싸울 수 있다는 해석 변경이다. 헌법 해석 변경으로 인해, 한반도 위기 시에 미국의 동맹국으로 일본이 군사적으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역할이 새롭게 부여되었다.

현재 한반도 위기 시에 일본의 관여 수준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1) 극동유사사태: 미일안보조약의 '극동조항'에 의거해 주일미군의 한반도 출동에 대한 적극적 군사 지원, 2) 평화유지활동 및 인도지원, 3) 중요영향사태: 미군에 대해 후방지원을 하는 자위대의 관여, 4) 존립위기사태: 집단적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미군과 함께 자위대가 북한을 대상으로 군사 활동을 전개, 5) 무력공격사태: 일본에 대한 북한의 공격에 대한 무력 대응

일본의 한반도 유사에 대한 관여 가능성은 2022년 안보3문서(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정비계획) 책정을 통해 보다 증가했다. 2022년 안보3문서에 도입된 반격능력은 적 기지로부터의 미사일 공격이 예상될 때 적 기지를 사전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일본은 이를 위한 미사일 공격능력을 구축하고 있다. 반격능력 행사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일본의 직접적 군사 억지 능력 강화를 의미한다. 일본의 반격능력은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에 대비해 부족한 미국 미사일 능력을 보충해 주는 의미가 핵심적이지만, 대북한 억지 능력에도 큰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일본의 증가하는 방위능력 강화의 핵심 대상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미중경쟁 시대 대만 유사에 대한 일본의 위기감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반도 유사시에 있어서 일본의 관여(주일미군 지원과 일본 자위대의 역할) 축소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3. 미중경쟁 시대 미국의 격자형 동맹 네트워크 정책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유럽의 나토와는 상이하게 양자동맹으로 구축된 허브앤스포크 시스템으로 안보질서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미중경쟁 시대에 미국은 다양한 소다자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격자형 동맹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파이브아이즈, 오커스(오커스플러스), 한미일, 미일필의 소다자 안보협력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 이 속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네트워크화에 대한 미국의 강한 정책 지향이 선명하게 발견된다. 더불어, 미국의 격자형 동맹 네트워크 구축 노력에서 안보 영역에서 일본의 역할과 위상이 과거에 비해 대폭 증가하고 상승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향후 잠재적 군사 충돌 가능성의 지역은 한반도, 동중국해, 대만, 남중국해 네 지역이다. 네 지역에서의 동시적 유사 발생에 대한 미군의 대응 가능성은 한계가 있다. 동중국해, 대만, 남중국해 지역에서 중국과의 충돌 경우, 미국에게 핵심적인 동맹 파트너는 일본이 된다. 한반도에서 한국의 핵심적 역할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은 국내적 논의 공간에서나 미국의 판단에서나 적은 편이다.

미국의 격자형 동맹 네트워크 지향은 실제 미국의 상대적 군사적 능력 약화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우위를 전반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미사일 전력에 있어서 열세에 있다.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를 통한 스탠드오프 미사일 방어력 구축은 미국의 대중국 미사일 전력 열위를 보충하는 요소가 된다. 현재 미국의 동중국해와 대만에 대한 대중국 대응 구상은 일본의 미사일 능력을 전제로 짜여져 있다.

동중국해와 대만의 유사가 합쳐지는 상황은 지난 2022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시 중국의 군사작전 와중에 발생했다. 중국의 군사작전 중에 중국군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11발 중 5발이 일본의 EEZ로 떨어졌다. 미국과 일본의 정책관계자들 사이에서 대만과 동중국해가 하나의 군사적 문제로 일체화하여 보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대응이 일본, 호주와의 협력 속에서 필리핀을 중심으로 하는 역내 국가 지원 강화로

전개되는 가운데, 대만/동중국해 유사에 대한 일본의 핵심적 파트너 역할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 변화 속에서 급진전되고 있다.

그동안 한반도 위기를 핵심적으로 논의되던 한미일 안보협력을 대만/동중국해로 확대하려는 미국, 일본의 구상 속에서 한국은 1) 한미일 안보협력을 한반도 위기 대응에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가운데, 2) 대만/동중국해 유사 상황 시의 관여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2)의 과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1)의 과제 해법 모색에서도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

4. 한반도 위기에 대한 한미일 협력, 한일 협력 대응 체제 증진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관심도 저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주일미군의 한반도 발진이 대만과 동중국해 유사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와 배치될 수 있다는 인식도 존재한다. 동아시아의 동시적 유사 사태 시에 한반도에 대한 미일의 협조 역량과 자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상황에 대해서는 한반도 유사가 대만/동중국해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북한 역지가 대만/동중국해 유사시에 대한 중국 역지의 가장 효과적 노력이기도 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발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한일 안보협력의 가장 큰 어려움은 국민적 수용도 증진에 있다. 국민적 수용도 부족 속에서 대북 역지를 위한 한일 안보협력에 대한 현재 한국 내의 정파적 인식 구도가 굳어지고 있으며, 이점이 한일 안보협력 증진의 가장 큰 난점이다. 현재와 같은 정치 구도에서 한일 안보협력의 급속한 제도화를 현실화하기 쉽지 않다.

다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 수용도가 높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협력에 일본이 관여하는 것에 대한 높은 수용도는 최근 10여 년 간의 한일 인식 상호조사에서도 발견된다. 결국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미국의 적극적 역할은 여전히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일본과의 양자 협력에 대한 한국 내 부정 여론이 행정부를 넘어도 의회를 넘기 힘들다는 점을 미국 측에 잘 전달하고, 제도화를 통한 해법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가 결국 현실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전달하는 대미 공공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한일 안보협력의 증진 방향성에 있어서, 한일 안보협력의 역사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적극적 관여 정책이 추진되던 김대중 정부 시절 한일 안보협력이 동시 추진되었다. 당시 한일 안보협력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대북 관여 정책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 한일 양국 사이의 핵심적 의제가 될 수 있었다. 당시 미국의 지원과 요구에 응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한일 양국이 대북 문제 해결에 대한 상호 인식 공유가 한일 안보협력의 추진 배경이었다. 한국 내에서 한일 안보협력에 대한 반대론이 한일 사이의 역사인식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점도 사실이지만, 한일 사

이의 대북 문제 해법에 대한 입장 차이가 보다 큰 요인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 내에서 북한 문제 해법에 대한 최소공약수로서 전략적 억지(평화적 관여와 북한체제 변경론 사이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그 최소한의 인식 공유를 기반으로 억지 수단의 방법으로 일본 역할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 증가에 적극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5. 유엔사령부 시스템 활용의 의의

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보다 넓은 차원의 국제사회 관여로 발전시키는 논의도 존재하며, 그 중심에 유엔사령부 시스템의 활용이 고려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관여를 적극적으로 견인하고, 이에 대한 가치적 측면의 성격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유엔군사령부 시스템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전쟁 시에 미군은 유엔군의 위상으로 한반도에서 작전 전개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16개국이 유엔군사령부에 전투 병력을 파견하였다. 1951년 9월 미일안보조약 체결 시에, 일본은 요시다-애치슨 교환공문에 의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효력 발생 후에도 유엔군의 일본 체류를 허용하고, 이를 용이하게 할 의무를 수락했다. 더불어, 1954년 6월, 유엔군이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 기타 지위 및 대우를 규정하는 유엔군지위협정이 체결되었다. 유엔군지위협정 제5조에 따라 유엔군은 일본 내 시설 중 일부를 합의하에 사용할 수 있다. 이곳은 연합군이 충분한 병력상의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 유엔군지위협정 제5조에 따라 유엔군이 사용할 수 있는 일본 내 시설 7곳은 모두 재일미군기지(캠프 자마, 요코스카 해군시설, 사세보 해군시설, 요코다 비행장, 가데나 비행장, 후텐마 비행장, 화이트비치 지구)다.

유엔군의 후방기지가 현재 모두 주일미군기지이며, 현재 한국내 유엔사령부(1957년부터 서울에 위치) 산하 병력의 절대 다수가 미군인 상황에서, 유엔군은 실질적 다국적 전투 병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군사적 차원에서 유엔군 시스템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 보기 어렵다. 유엔후방사령부는 실질적인 다국적 전투부대가 아니라는 점과 유엔사 후방기지가 모두 주일미군기지라는 점에서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개와 차별화된 군사적 효과성을 덧붙이는 성격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일본 내 자위대의 기지는 유엔사 후방기지가 아니다. 즉 한반도에서 군사작전 전개하고 일본에서 후방지원 받을 때, 미군의 경우, 7개 유엔사 후방기지는 미군기지로 사용되는 곳이며, 미일방위가이드라인 및 협의 속에서 일본 내 자위대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유엔군으로 미군이 아닌 다른 국가의 군대가 한반도에서 군사작전 전개하고 일본에서 후방지원 받을 때, 미군 기지와 중첩되는 7개 곳에서만 가능한 것이 현재의 법적 조건이다. 일본 내 자위대 기지로 유엔군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없다. 최근 일본은 영국, 호주, 필리핀과 원활화협정(RAA)을 체결하였다. 원활화협정을 통해 이 국가 군대는 일본 내에 들어와 자위대 기지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의 유엔사 시스템 속에서 이들 군대는 유엔군의 명목으로 7

개 기지를 활용하고, 자위대 기지를 이용하려면 유엔군이 아닌, 자국 군대의 위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일본이 맺은 원활화협정과 유엔군지위협정과 상호연계성은 발전되어 논의되어 있지 않다.

다만, 현재 격자형 네트워크 속에서 가치공유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유사입장(like-minded) 국가의 다자적 가치공유 안보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레임으로 유엔사령부 시스템의 의의를 논할 수도 있다. 미국의 대만/동중국해 유사에 대한 가치공유 안보 협력의 제도화는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유엔사령부 시스템이 다자적 안보 협력 틀로 재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넓은 국제사회의 한반도에 대한 관여 견인을 모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현재 유엔군 시스템의 가장 큰 의의는 주일미군 한반도 발전을 유엔군 활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주일미군의 한국에 대한 관여에 미일안보조약의 루트와 더불어 유엔군지위협정의 제2의 루트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주일미군의 한반도 발전에 대한 일본의 지원은 미일 안보협력 속에서 발전되어 왔으나, 유엔군 루트가 이 활동에 대한 국제적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국내에서의 가치 부여에서 원활한 성격을 지닌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2의 루트인 유엔사 시스템은 제도화 수준이 높지 않다. 한국에 위치하는 유엔사령부의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며 한미연합사령관이기도 하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작전명령체계가 일체화되어 있는 가운데, 미일 사이의 협력은 현재 일본 자위대의 통합사령부가 향후에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군과 작전을 조정하는 계획 단계에 와 있다. 자위대 통합사령부와 인도태평양군사령부의 미일 사이의 작전 조정은 한반도의 한미 안보협력과 직접 일체화되어 진전되기 어렵고, 실제 타겟은 대만과 동중국해임에 분명하다. 한반도에 관한 미일 안보협력이 유엔군 시스템으로 작동시키려면, 한국에 소재하는 유엔군사령부와 일본의 유엔후방사령부, 그리고 일본 정부 사이의 제도적 협력 메커니즘 발전이 필요하다.

현재 유엔군사령부와 일본 정부 사이의 조정을 위한 제도로써 합동위원회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 성숙도가 높지 않다. 유엔사 시스템완성도가 높지 않다. 유엔군 시스템을 통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진화를 논하려면, 유엔군지위협정에 명시된 합동위원회와 실제 요코스카기지의 미7함대 블루리지함에 설치되어 있는 유엔군지위협정 집행조정소가 현재 제도적 불투명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바꾸어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제도발전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수준으로 관여할지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함께 필요하다.

6. 대만/동중국해 위기와 한국의 역할

대만과 동중국해의 유사에 일체화되고 있고 미국과 일본 내에서 대만 유사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주장도 강화되고 있지만, 대만 유사시 미국의 직접적 군사 개입의 정도와 폭은 현재도 불확실하다. 미국과 일본이 대만 정책에 있어서 전략적 모호성을 여전히 유지하는

가운데, 대만 유사시 대만과의 군사적 협력 가이드라인도 부재한 상황이다. 미국과 대만의 관계 설정 미비 속에서 대만 유사에 대한 한국의 구체적 역할 부여 논의는 과도한 측면도 있다.

다만, 주변의 유사 상황에 대한 관여에 있어서 다층적 가능성을 구축해 놓은 일본의 사례가 한국에게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한국에 있어서 한반도를 벗어난 유사 상황 시에,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 미군과의 공동 작전의 가능성에 대한 상황 설정 자체가 현재 부재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일안보조약과는 달리 주한미군의 해외 발진에 대한 문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일미군이 해외 발진하는 것을 전제로 발전해 온 미일방위 가이드라인이 한미 사이에 발전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해외 발진 가변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해외 발진에 대한 한국군의 관여에 대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고 이 마련에서 일본의 다양한 사태 설정을 참고할 수 있다.

동아시아 유사는 역사적으로 한반도, 양안, 동남아에서 언제나 동시 진행형이었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한반도와 동중국해/대만의 동시 유사시에 삼국의 군사적 대응에 대한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로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논의가 2023년 캠프데이비스 회담에서의 '협약에 대한 공약'의 후속 정책 협의 과정에서 중심적 부분이 될 것이다.

7. 신형안보 영역의 한미일 관계

기술혁신의 군사적 활용은 역사적으로 군사안보 정책의 성격을 변동시켜 왔다. 최근 우주, 사이버, AI 등의 첨단 기술혁신이 안보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의 안보협력(기술개발 관련 협력과 별개로)이 작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향후 안보협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되어 논의되었다. 신형안보 분야의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본 성격이 대중국 억지임도 분명하다. 다만, 신형안보 분야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전통안보 분야의 한미일 안보협력에 비해서 미일협력의 중심성이 선명하다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 신형기술 분야 협력은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넘어서 보다 구체적 내용으로 전개될 수 있는지 또는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어 있지 않다. 최근 신형기술 분야에서 한일협력, 한미일 협력은 대중 견제를 전제하고 있으나, 협력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가 협력 당사국들에게 어떻게 배분될지에 대한 계산에서 그 미래 불투명성이 크다. 이 지점에서 신형안보 분야별 한일협력 및 한미일 협력에 대한 각론적 책략이 필요하고, 분야별 각론에서 한일협력 및 한미일 협력의 폭과 속도가 한국의 그 분야 국가경쟁력 확보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수동성 추종과 능동적 선도의 전략적 판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우주안보 분야에서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능동적이고 선도적 자세를 지니기는 어렵다. 로켓개발 분야에서 나름 자기주도적 개발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우주안보 분야에서 최근 미국 추종적 자세를 강화하고 있다. 우주의 군사적 이용과 우주 영역에 대한 군사

적 공격 가능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우주정책에서 안보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우주 분야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는 별개로, 자위대 중심으로 향후 전개될 우주안보정책 분야는 전통적 지정학 전략과 유사한 미일협력 중심성을 매우 강하게 보이고 있다. 우주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위치는 일본보다 열악한 편이며, 미국의 위성통신 인프라 속에서 경제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에게 우주안보 분야에서 한미협력은 필수적이다. 우주안보 분야에서 한일협력은 그 자체로 큰 시너지를 내거나 양자의 매력 유인을 창출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우주안보 분야의 패권 갈등(미국 대 러시아, 중국)의 구도에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새로운 국제규범 창출에 함께 이바지할 수 있다.

갈수록 그 의미가 확대·강화되고 있는 사이버안보 영역에서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 안보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상대적으로 좀 더 기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이라는 존재와 일본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법적 해석 문제에 있다. 글로벌 사이버평화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북한의 존재감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대응의 협력에서 사이버안보 분야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안보 분야의 대북 억지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력과 한일협력에서 한국의 정보 능력과 주도성은 지금까지 의미있었고, 앞으로도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북한 문제 대응에서 한국이 유미의한 주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전통안보 분야와 우주안보 등 신형안보 분야의 여러 영역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1 파트너가 일본인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일본의 적극적 대미협력은 현재 다소 한계가 있다. 사이버 영역에서는 공격과 수비를 구분하기 어렵고 따라서 선제적 성격을 지니는 적극적 사이버안보정책은 공격에 대해 수비를 한다는 전통적 전수방위 원칙과 공존하기 쉽지 않다.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사이버안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있으나, 이를 국내법으로 담아내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단계이다. 더불어 ACD(Active Cyber Defense) 개념을 도입하더라도 한국의 공세적 사이버안보 정책에 비해서 사이버공격에 대해 다른 수단을 동원한 공세적 대응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사이버안보 분야의 한미일협력과 한일협력에서 한국의 역량과 위상은 상대적으로 크고 높은 편이다.

<참고자료>

※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사이버안보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